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05호 / 01월 22일

중국정부의 經濟部處 개편 논의 현황과 전망

1. 기구 개편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

- 오는 3월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경제부처의 기능통합 및 신설부처 설립 등 대대적인 기구개편이 예상된다고 1월 17일자 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함.
- 대외무역경제합작부(Moftec)는 타 부처의 유관 기능을 흡수하여 확대될 것이며, 국유기업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처가 신설될 전망이다.
- 또한 경제기구 개편은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원자바오 현 부총리의 직접 지시 사항이라고 전함.
-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대형 국유기업의 관리와 중소형 국유기업의 해외매각을 전담할 예정이다.
- 중국은 지난 1998년 주룽지 총리의 주도로 경공업부, 화학공업부 등 산업별로 구분된 부서를 국가경제무역위원회내 국으로 통합하는 등 대대적으로 기구 개편을 단행한 경험이 있음.
- 그러나 기능이 대폭 확대된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산업구조조정의 역할보다 산하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바, 경제무역위의 일부 기능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

이전될 가능성이 있음.

2. 중국 현지 유관 인사들의 논의 내용 및 평가

- KIEP 북경사무소가 실시한 중국정부 해당부처(대외무역경제합작부, 국가경제무역위, 인민은행, 외교부) 고위인사들과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, 현재 국유자산관리부처의 신설계획안이 확정되었을 뿐, 여타 부문의 개편 방안은 아직 논의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- 첫째, 중국 최고위층은 部級(장관급) 국유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유자산관리 업무를 전담하기로 확정함.
 - 즉 국가발전계획위 投資司, 국가경제무역위 國有企業改革司, 재정부 國有資產管理司, 인사부 大型企業工作委員會 등의 업무를 신설 부처로 이관함.
 - 신설 부처는 국유기업의 재산권 분할, 국유기업의 주식제 기업으로의 전환, 부실기업의 처리 등의 업무도 총괄할 것으로 알려짐.
- 둘째,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기능 조정이 논의되고 있으나, 업무분장을 놓고 부처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것으로 보임.
 -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경제무역위가 담당하고 있는 일부 상품의 대외무역 업무 등을 이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, 경제무역위는 오히려 일부 상품의 무역 및 외자이용 관련 기능을 산업담당 부처인 경제무역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기능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임.
 - 현재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담당하고 있는 대외원조 업무는 외교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나,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음.

- 한편 미국식 USTR 신설 논의도 나오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

□ 셋째, 인민은행의 기능 개편과 관련해서는 은행감독위원회의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.

- 은행감독위 설립은 그 동안 계속 제기되어온 사안인바, 인민은행이 담당해 온 은행감독, 규제 등의 업무를 신설될 동 위원회로 이관하고, 인민은행은 통화정책(이자율 조정정책) 수립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- 그러나 은행감독위 신설 문제는 조직개편 이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됨.

3. 전망

□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논의 결과에 기초한 정부개편안을 금년 3월 초 제 10기 전인대에 상정 · 확정할 방침인바, 2월 중순경에는 기구개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.

- 3월에 열릴 전인대는 지난해 11월 제16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자리인바, 새 지도부의 정책에 맞게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부처간 기능이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
- 현재로서는 ▲국유자산 관리부처의 신설, ▲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경제무역위원회의 기능 조정, ▲은행감독위원회 신설 검토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.

□ 기구개편의 주목적은 정부부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고 대외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인바, 향후 관료조직의

유연성과 함께 시장경제에 보다 상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기대됨.

- 그러나 중국은 1998년에도 주룽지 총리 주도하에 대대적인 정부기구 개편을 단행(31개 부, 9개 위원회로 구성된 기존 조직을 25개 부 4개 위원회로 대폭 축소)했으나, 부처간 이해상충과 인력 재배치 문제 등으로 내실이 축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, 이번에도 최종 결과는 언론보도 내용보다 훨씬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.(***)